

한라포커스 2020년 '위기 넘는 질적 도약 준비' <5>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

차별화된 제도 개선으로 '제2도약' 을...

'지역형평성' 반대논리 넘어설 논리 강화 절실
선택과 집중 통한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 필요
실질적 권한 이양·도민 삶의 질 향상 초점뒤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부터 5단계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 지난해에는 11월 6단계 제도개선 과제(35개)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2월 공포됐다. 하지만 외형적 성장 속 재정특례 등 주요 핵심 과제들이 빠지면서 차별성을 잃은 '무늬만 특별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7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 윤곽을 잡은 도는 올해 도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제2도약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방분권 시대,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국제자유도시 조성 완성을 향한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비롯해 '지역 형평성'을 앞세운 정부 부처의 반대논리를 넘어설 중앙 절충·논리 강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성과 속 한계=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국토관리·중소기업·해양수산·보훈·환경·노동 분야 기관의 도지사 소속 이관, 교육자치(교육의원)·경찰자치(자치경찰) 실시, 도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와 정책자문위원 제도 도입, 지방세 특례와 재정지원 특례로 일부 자치 재정을 이룬 것 등이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중앙사무이양에 따른 일부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핵심과제들이 중앙 논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특별자치도 취지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개선에 따른 도의 미흡한 후속조치도 도마에 오른다.

9월 도에 따르면 그동안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권한 5181건(이양된 4537개 권한을 개별사무로 나누어 도출한 수치) 중 4401건

(85%)이 활용, 780건(15%)건이 미 활용되고 있다.

도는 미활용 유형 중 99.6%(777건)를 차지하는 4유형(대통령령·부령→도조례)은 대부분 전국 공통사항과 절차 관련 사항으로 조례 개정 실효가 없어 미개정하고 시행령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부지의 경우 양여 가능 특례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대체 부지 제공을 요구하면서 계속 협의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개선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과제발굴부터 입법화까지 과정이 장기화되다보니 과제발굴의 '선택과 집중'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갈 길 먼 '특별자치도 완성'... 제2도약 주목=제주자치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13년이 지나면서 대외적으로는 전국 통일성과 지역 간 형

평성 논리에 막혀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부의 지원이 약화되고, 내부적으로는 단계별 제도개선 과제의 입법화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전반적인 추진 동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특별자치도의 제2도약을 위해 올해 추진동력을 재정비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함은 물론 자치분권의 도민체감도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만사불여(萬事不如) '튼튼'... **집중농는 어르신들** 9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공터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초가에 새로 이을 집중농기 작업을 하고 있다. 초기지봉을 이을 집중농기 작업은 봄맞이 새 단장을 위해 보통 1-2월 사이에 이뤄진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48만원으로

관할 읍·면·동 등서 신청 가능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137만원에서 올해 148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인상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이에 따른

사업비 1946억3300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매년 상향 지원되고 있다. 단독가구인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월 최대 30만원 지

급 대상인 경우 지난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40%까지 확대 지원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복지로에서 본인의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해 수혜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 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고품질 감귤 생산 위한 '원지정비' 확대

제주도, FTA기금 98억 투입
 우량품종 갱신 사업 등 추진

제주도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기금 98억원을 투입해 감귤원 원지정비 사업을 추진, 오는 31일까지 농가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원지정비 사업은 밀식 감귤원은 '우량품종 갱신사업', 노령 감귤원은 '우량품종 갱신사업'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 생산이 가능한 '경제과원'으로 바뀌어나가 것을 말한다.

지원 기준은 보조 70%(FTA기금 20%·도비 50%), 국고융자 20%, 자부담 10%로 진행된다. 특히 사업에 선

정될 경우 성목이식은 2년, 우량품종 갱신은 3년 동안 ha당 700만원의 비료·농약 등 농자재가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 및 요건은 최근 5년 이내에 농·감귤에 출하실적이 있고,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간 농·감귤과 출하 약정한 경영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1일까지 농·감귤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매해 다양한 종류의 과일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제주감귤이 소비자의 외면을 받지 않으려면 경제과원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런 사업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송은범기자

4·3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 본격 착수

평화재단, 생존희생자·유족 등 자문위원 위촉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이 제주4·3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센터 운영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4·3평화재단은 8일 오후 4·3평화 기념관에서 '4·3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4·3생존희생자·유족·관련 전문가 등 7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문위원장에는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김문두 교수(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가 선출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위촉식 이후 자문위원들은 4·3트라우마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향후 >센터설립 공청회 개최 >관련규정 개정 >접근이 용이한 센터건물 확보 >센터시설 마련 및 인력 채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4·3트라우마센터 운영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설립 법제화가 늦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국가폭력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시범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전문치유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제주4·3과 광주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시범운영하도록 했으며, 각각 제주4·3평화재단과 광주광역시에 운영을 위임했다.

이날 선임된 4·3트라우마센터 자문위원은 다음과 같다.

- ▶당연직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송승문) ▷제주4·3생존희생자후유장애인협회장(오인권)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장(김길범)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직대 오승국) ▶선임직 ▷김문두(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김선현(대한트라우마협회 이사장) ▷맹지원(광주트라우마센터장). 조상윤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경자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도민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길!

태양광 발전사업

풍력 발전사업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EV충전 인프라 구축

에너지개발 연구센터

친환경에너지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만들어가는 **제주에너지공사**

www.jejuenergy.or.kr
T.064-720-7400



제주에너지공사
 JEJU ENERGY CORPORATION